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200014-14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202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펴내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유권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더없이 빛났던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역사에 새겨 넣으며 선거는 마무리 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희망이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바뀌어 갈 새로운 4년의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직접 제안했던 희망공약들을 모아 「2020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1,304건의 희망공약 중에서 54건을 선정해 E-book에 담았습니다.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디어부터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웃의 어려움까지 유권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엮어 만든 본 모음집이 제21대 국회와 정당,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권자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정책적 울림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정책 소통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 5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모음집에 수록되지 않은 희망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음집에 수록된 공약 제안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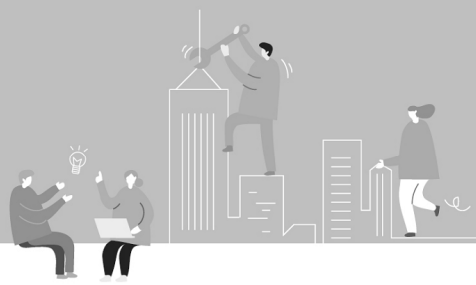
# Contents

## Part 1. 사회·복지 분야

1.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3
2.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5
3. 임산부, 영유아 건강보험 확대정책	5
4. 초등 열린 돌봄센터를 만들자	7
5.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학생 관련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9
6. 아동급식카드 전면개편 제안	10
7. 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 피해 아동에 국가양육비 우선 지원	11
8. 사회복지시설의 중증장애인 의무 채용 제도화	12
9.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정책에 대한 희망공약 - 장애인 콜택시	13
10.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성공취업 전략 제안	14
11. 치매어르신들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안전 야광지팡이 제작·배포	15
12.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노동 제안	16
13. 치매예방을 위한 고령자 전문교육 시행	17
14. 고령화시대 대비 장년층 디지털교육	18
15. 산간오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순찰정비요원 및 의료봉사, 빨래, 말벗 도우미 서비스 파견	19
16. 열악한 농촌 교통환경에 대한 대안 - 농촌에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20
17. 심각한 자살률을 낮추는 획기적인 제안	21

## Part 2. 경제·민생 분야

18.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25
19.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8
20. 소중한 전세자금, 전세 사기를 막아주세요	29
21. “소상공인 살리고 지역경제 올리고” 제안	30
22.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조화된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31
23. 사고파는 집이 아닌 살아 갈 집이 필요합니다	35
24.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 설립 제안	36
25.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의 활성화	37
26. 비정규직 차별·착취 없는 희망찬 대한민국 실현	38
27. 독도 디자인센터 구축	39
28. 관광통역안내사의 특수고용직 인정을 제안합니다	40
29. 천안 시내버스 관련 희망공약 제안	41



### Part 3. 교육·환경 분야

30. 갭이어(Gap year) 정책 시도 .....	45
31. 국가와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제안합니다 .....	46
32. 학교 밀집지역 수일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이들 꿈이 자라는 공간으로 .....	47
33.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연기로 인한 보충교육제도 실시 .....	49
34. 과도한 졸업인증제 제한안 .....	51
35.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과 예절 교육을 위해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	54
36.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조치와 사후예방 제안 .....	57
37.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약 .....	58
38. 기존에 사라졌던 버스정류장 쓰레기 분류함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	60
39. 흡연부스 설치 제안 .....	61
40. 종이테이프, 친환경 충전재 사용 확대 제안 .....	62
4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	62

### Part 4. 정치·행정 분야

42. 퍼스널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관련 시스템 구축 제안 .....	67
43.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 강화 .....	68
44. 공익근무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	69
45. 인플루언서의 SNS 허위 과장광고 제재 방안 제안 .....	70
46.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경찰청의 범죄 차량 데이터베이스 연동 .....	71
47. “예비방역팀” 설치(APP 개발) .....	72
48. 약국 내 히트맵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학조사 프로세스 구축 .....	73

### Part 5. 기타 분야

49. 동물병원 진료비 통일화 또는 진료비 공개 .....	79
50. 폐의약품수거함 규격화 제안 .....	80
51. 여름철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 쉼터 마련 .....	81
52. 따릉이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한 제안 .....	81
53.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사용 자제 유도 방안 제안 .....	83
54. 채용 시 불합격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유 공개 제도 도입 제안 .....	8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사회·복지 분야







## Part 1

# 사회·복지 분야

## 1.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 🔍 정책의 목표, 우선 순위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의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대만 1.06명, 홍콩 1.07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 1.42명으로 모두 0.98명인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평균 1.68명은 커녕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듯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저출산은 더 나은 복지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극복하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욱 악화된다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에 저출산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입니다. 여성은 출산의 과정을 겪으며 몸은 안 좋아지고 사회적 커리어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출산 이후에 양육을 하며 부담해야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얻는 기쁨보다 아이를 낳아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뻔히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 아이를 낳으려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과 양육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 조리부터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초기 비용 등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에게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군포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지원해주는 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시·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등등 금액을 대폭 늘려 출산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 2. 양육비와 산후조리 지원

평균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아이 당 약 4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양육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여성은 출산 후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반드시 산후조리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 한 번 대충했다가 평생 골병을 얻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출산 이후 양육과 산후조리에 도움이 필요한 부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 3. 일자리 복귀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일인데 여성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정부가 회사에 출산을 겪은 여성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재원 조달 방안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각 지자체의 여유자금을 활용합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가는 요즘, 재정 지출 개혁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 🔍 정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출산율이 최소 2명대가 될 때까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절감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이 많지만 나중에 가서는 일할 청년이 없어 힘들어지는 회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마치 현재의 일본처럼 말이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으면 힘들어진다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양육과 출산을 개인 혹은 가정이 온전히 부담하는게 아니라 나라와 같이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2.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2018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나라입니다. 물론 출산을 하지 않는 상황에는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게 간절히 원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후, 초반에는 경제적 여유 등으로 자녀 출산을 늦춰왔으나, 막상 자녀를 가지려고 하니 잘 생기지 않아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저와 같은 이유로 전문 병원에 방문하는 수많은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더 젊고 활기찬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 그간 건강하다고 생각한 저희 부부에게 닥친 어려움에 정말 힘이 듭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 병원비용, 시도가 거듭될 때마다 더욱더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 실패할 때마다 오는 정신적 고통... 다행히 그간에도 정치권과 정부에서 노력해주시어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었고, 보건소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에 실패할 때마다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난임병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약들 중 아직 비보험 대상인 약들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지원 횟수 부분을 상향하거나 없애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난임 부부들을 도와 주시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각종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쓰이는 예산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3. 임신부, 영유아 건강보험 확대정책

### Q 건강보험 확대정책(출산장려와 영유아지원 건강보험료 확대)

#### 1. 기형아 정밀검사(양수검사, 니프티 검사) 건강보험료 확대

임신을 하고 여러 검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기형아 검사를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기의 엄마와 아빠는 비용부담이 줄고 기형아 검사를 하여 자신의 아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1차검사서 “○○기형아입니다.”라고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건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기의 엄마와 아빠는 추가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원에서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병원마다 평균 50만원~70만원 정도 합니다.

임신을 하면 임신부에게 바우처(2019년부터 2020년 현재) 첫째아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비용을 정밀검사에 써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부담이 되어서 정밀검사를 포기하고 다른 출산관련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양수검사등 정밀검사가 건강보험확대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힘들다면, 1차 검사에서 기형위험도가 높은 임신부에게 건강보험확대가 필요하며 기형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로 받겠다고 한다면 비급여로 하여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 지원책 중 기형아 정밀검사는 건강보험확대를 통해 비용부담을 줄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 2. 출생 후 유전자검사 건강보험확대

출생 후 난청검사등과 더불어 유전자 검사 등을 병원에서 시행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난청이 발견되면 조기에 보청기, 수술 등을 통해 교정을 하여 난청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만 다른 유전자 검사 등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30만원~50만원 자기비용부담을 합니다. 부모는 유전자 이상, 기형아 소견 등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교정(수술)을 해서 정상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최근 발달지연, 발달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알아내서 발달프로그램으로 교정을 한다면 발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3. 필수 예방접종 확대 또는 건강보험적용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몇몇 접종은 선택접종이라고 하여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많이 듭니다. 선택접종도 질병이 취약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접종입니다. 선택접종이 아닌 필수접종으로 바뀌어야 하며, 재정문제를 인해 모두 필수 예방접종확대가 불가능 하다면, 본인부담금을 줄여, 모든 아동과 가정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4.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남자아이에게도 확대적용

현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아이에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이 되어서 모든 여자 아이에게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선택접종이라서 부모가 맞추고 싶으면 맞게 합니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한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높은 요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이며,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전파가 됩니다. 여자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예방효과가 높지 못합니다.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 모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예방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 🔍 우선순위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입니다.

### 🔍 정책 실현 절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소요기간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며, 국민 의견검토, 관련 위원회 정책검토 및 행정과 법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 🔍 재원마련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비로 마련

## 🏠 4. 초등 열린 돌봄센터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6동에서 공부방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50대입니다. 근처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취약계층 우선순위로 입소를 하고 센터의 특성상 고학년이 되면 입소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를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또래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가정에서는 학원이나 공부방에 보내는 것조차 부담이 되어 끊거나 정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 많은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부모님들께서는 일을 하시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으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불안해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하던 저는 우연히 YTN뉴스에서 다루는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하게 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시비와 국비로 운영되고 22년까지 20곳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요. ‘우리 안양에서도 하면 좋을텐데... 어디에 건의하고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던 중 “유권자가 제안하는 우리나라 희망공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이웃의 많은 직장맘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안양에는 31개 정도의 동이 있습니다. 동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개의 동에는 작은 도서관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작은 도서관을 ‘다함께 돌봄센터’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지금도 작은 도서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 곳을 이용하면

- 첫째, 도서관 홍보가 되어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며
- 둘째, 장소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 셋째,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돌봄이 강사 채용에 관한 것인데요. 안양시에서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20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시니어 분들을 채용하여 여기에서 근무하시도록 하게 되면 시니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직장맘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니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니어 채용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현재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공부방을 정리할까 생각했지만 저에게 오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정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달리 공부가 힘들거나 재미없는 친구들을 반겨주거나 환영하는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는 아픔을 다른 것으로 풀고, 부모님은 알면서도 도와 줄 수 없으니 안타까움만 더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친구 중 한 명도 저를 만나 1년 2년 지내다 보니 이제는 속 이야기도 하고 새 학기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이 또한 중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도 엄마도 주위에서 받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연유로 공부방을 정리는 할 수 없고 해서 2가지 일을 해 볼까 하는 맘에 이력서를 20군데 이상 넣어 봤지만 면접은 2군데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과 경험도 있고 방과 후 지도사 자격증, 독서지도 자격증과 경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45세 이하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더군요.

수원시에서는 1곳당 국비 7,000만원, 시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강사비와 어느 정도의 운영비만 들지 않을까 싶네요.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며, 급·간식비는 오는 아이들이 부담하게 되면 지역의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각 가정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저 같은 시니어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주니 지역사회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학생 관련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것을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 제안이유

현재 수원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수원의 200여 개의 학교 중 56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과 가정,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를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학교 내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다양한 문제(학교부적응, 가정문제, 학교폭력 등)를 다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종입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을 둘러싼 학교-가정-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은 전체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2015년 9월 이후 지원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내 사회복지사업이 점차 많은 학교로 확대된다면 학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소요예산**

학교당 4천만원 내외 (경기도 학교 내 상담 복지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참조)

## 🔍 **재원조달방안**

현재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내에서 지원받는 사업들 중 지자체 예산을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조달받는 것도 한가지의 재원조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 **6. 아동급식카드 전면개편 제안**

급식대상아동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선이 필요하며, 서울·경기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개편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편의점 위주로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음식점 사용이 적은 이유는 편의점에 비해 결제가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데, 현재 아동급식카드는 지역별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 후 미리 해당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현재 아동급식카드는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제3자가 급식카드임을 알 수 있고 급식카드 결제 단말기의 결제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아동에게 수치심이 들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이 아닌 PC에서만 가맹점과 잔액조회가 가능한 불편함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스템을 전면개편하여 전국의 급식아동들이 어느 곳에서나 차별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① 아동급식카드를 IC카드로 전면 교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②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 ③ 급식아동의 영양불균형(가맹점 확대) 및 낙인감 해소(카드 디자인 및 결제 간소화) 문제가 필수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급식아동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음식점에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 7. 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 피해 아동에 국가양육비 우선 지원

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 1차 피해자는 양육 대상자(아동)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는 아이들 생존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확보는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국가가 아동양육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예산 확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 한부모가구 수는 153만이고,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한부모가구 양육자가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며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한부모가구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고 자녀 생존을 위협하고 사지로 내몰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지급을 해태하는 행위는 아동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을 하는 등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 간 채무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양육비를 확보할 국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 방법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피해아동 숫자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며,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 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제도와 예산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가(여성가족부장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자(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제도 및 예산이 공약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사회복지시설의 중증장애인 의무 채용 제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생학습 및 원격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사회복지사들은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 취업도 경증 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은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활동하기에도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개선점

- 영리 및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 제도를 마련한다(최소 정원의 5% 이상으로, 일반적 의무고용률 3% 높게)
-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 임금의 일부를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하여 기관의 임금부담을 덜어준다
- 중증장애인 우수 고용 사회복지시설의 사례를 공모하여 전국에 전파해 정보 공유
- 사회복지시설 시설 평가 시 중증장애인 고용여부에 가산점을 주어 사회복지시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기대효과 및 예산

-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
- 장애인 사회복지사로 활동함으로써 같은 취약 계층(동료 장애인등)에 희망을 줌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지자체의 보조금등으로 인건비 부담 감소
- 고용복지를 통한 중증 장애인 사회적 참여 확대

## 9. 지체장애나 지적장애 정책에 대한 희망공약 - 장애인 콜택시

안녕하세요.

17년째 지체장애2급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애가족의 며느리입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외래 재활병원도 다니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그나마 서울이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들보다는 아무래도 혜택을 수월하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적어도 진료시간 몇 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서 가야 그나마 진료시간에 맞춰서 재활을 할 수 있고요, 진료가 끝나면 하염없이 콜택시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기사님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저랑 같이 어머니를 부축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기사님들이 매번 늦어지고 또 계속 지연되니 이런 상황이 더 악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료가 끝나고 콜택시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 희망공약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하면(콜택시가 안 오거나 지연되는 상황) 일반택시를 이용한 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이 때 장애인 콜택시 금액만큼만 장애가족이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결제를 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횟수를 한 달에 몇 번으로 정해두는 조건을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이용을 못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조차(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어서) 못 내려가셔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제가 24시간 같이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 경우 119라도 부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많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이 살아가기엔 실상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독감예방접종조차 맞을 수 없으니까요.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려해도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라서 요양등급 산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장애등급으로 인한 혜택만 겨우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의 생활은 잊은 지 오래고요. 이제 아이들의 도움까지 받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은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있지만 뜬구름 잡는 공약보다는, 장애인 콜 택시를 늘려주시는 현실적인 공약이 있었으면 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장애인 콜택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가뜩이나 불경기인 이 시기에 개인택시 기사님도 일반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도 '원원'하는 공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0.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성공취업 전략 제안

### 🔍 제안이유

#### 1. 시각 장애인의 취업률이 너무나도 저조한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는 약 249만 명. 그 중 취업자 수는 86만 명으로, 취업률은 34.5%에 불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취업률(61.3%)의 절반 정도다. 통계청이 밝힌 장애인 실업률은 6.6%(6만 1천 명)이며 이 또한 전체 인구 실업률인 4%보다 높은 수치다.

#### 2. 대부분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현재 장애인 임금노동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 신분이다.

#### 3.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중장애인 30% 이상 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최대 10억 원까지 무상지원금을 제공한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목적으로 무늬만 표준사업장인 시설을 설립하기도 한다.

### 🔍 주요내용

실제 기업취업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 월1회 시각장애인의 성공취업사례 설명회
- 주1회 모의면접 진행
- 주1회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분석
- 주1회 이력서 작성
- 월1회 실제 기업 서류작성 및 지원

### 🔍 예산

프로그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금회와 타 재단을 통해 예산 확보 추진  
사례 홍보를 통해 개인 혹은 기업 기부로 후원금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1. 치매어르신들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안전 야광지팡이 제작·배포

### 🔍 제안이유

어르신들이 어두운 밤에 배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행하는 보호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고, 무방비로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의 안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mart LED 야광지팡이」를 제작하여 어르신께 배포했으면 합니다.

### 🔍 무엇을

Smart LED 야광지팡이를

### 🔍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께 지역 통장이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 🔍 언제까지

권고기간을 드리고 소진하는 기간까지(꼭 필요하신 어르신께 드림)

### 🔍 소요예산

약 100개 × 약 10,000원 = 1,000,000원

### 🔍 자원조달방안

국회의원 세비에서 충당하여 제작했으면 합니다.

## 12.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노동 제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실버 세대에게 사회 재진출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실버 세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역시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의 고령 인구 급증은 청년층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 및 고령 인구를 위한 국가의 복지비 부담이 막중해지는 일이기에 꼭 환영할 만한 현상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엄연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란 점을 인식한다면 사고의 긍정적 전환도 필요할 때이지 않나 싶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의료 및 복지 시설을 세우는 이른바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버산업도 우리 어르신들을 이윤 추구의 대상이나 한 소비 계층으로 바라볼 뿐이지 생산 계층으로 인식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는 데는 소홀한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데 비해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우리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노동력이 절실한 이때, 실버 세대는 스스로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 바람에 걸맞은 국가의 경제 활동 지원 사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버 세대를 마치 애물단지처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도 아직 엄연히 잔존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저조하기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우리 어르신들이 힘에 벅찬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을 통해 풍족한 삶의 질을 향유함은 물론 자기 계발 및 사회 기여의 성취감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일명 ‘실버문화단지’의 조성을 정부 당국에 제안하고 싶다.

‘실버문화단지’의 취지에 대한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실버문화단지’는 기존의 파주 출판도시나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조성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어르신의 어르신에 의한 어르신을 위한 일종의 문화·예술 분야 특화 대규모 문화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국가의 예산 지원 아래 각 지자체가 접근성이 편리한 교외 지역에 시설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고용해 어르신들이 같은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출판 및 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공기 좋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문화생활 및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어르신들의 보수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문제로 대두되겠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문화 바우처에 관심을 가진 대기업 등이 합심해 예산을 마련하고 든실한 실버잡지의 출판과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춘문예 실시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 어르신들이 주체와 객체가 된 출판 및 예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한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로서 지금 우리의 풍족한 삶의 밑거름 역할을 한 공로자들 이니만큼 그 땀을 보상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세대보다 시대의 곡절을 겪으며 많은 애환을 두루 갖고 있느니만큼 그 가치를 문화상품이나 예술작품으로 승화해 실버세대는 물론 전 국민과 함께 교감할 자격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 혹은 고령화 사회는 비단 우리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떠안고 고민하는 국가적 문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서 우리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 때문이리라.

사람이 노년을 맞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듯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연로해 가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는 일이리라. 그러기에 모든 노인 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과 같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모쪼록 정부 당국이 현명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는 곧 우리 자신들이 바라는 자화상이기도 하니까.

### 13. 치매예방을 위한 고령자 전문교육 시행

고령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늘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치매환자의 증가이다.

치매환자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치매환자의 특징은 현재까지 완치가 불가능하며 방치할수록 치매 중증도는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점인데, 이런점에서 치매환자의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사전예방으로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를 막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예방센터가 있지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

#### **방법 1. 각 주민자치센터를 활용**

- 현재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용중인 곳이 많은데 여기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
- 주민센터에서 관할 주민 전수조사하여 치매예방이 필요한 연령대 및 위험군을 설정하여 집중관리 및 홍보
- 센터차량을 이용하여 순회방문 및 대상자 교통편의 제공

## 방법 2. 치매예방 교육자료 배포

- 치매예방에 좋은 교육자료(예를 들어 블럭이나 퍼즐과 같은)를 해당자(치매위험군 및 관리대상자)의 가정에 주기적인 배포
- 다양한 교육방법을 홍보 및 설문 등을 통한 피드백, 이를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방법 설계로 지속관리
- \* 위와같은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환자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 예산부분

방법 1 부분은 현재 자치센터에서 여러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어서 운영프로그램 조정으로 얼마든지 추가 비용없이 진행할 수 있음

방법 2 부분은 자치센터 관할 주민중 위험군 및 대상군을 1%정도라고 가정시(보통 동 기준 2만명 내외) 200명 수준이다.

1달에 1만원 정도 교육자료 제공을 한다면 1달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필요. 이는 각 자치구에서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더구나 치매예방의 목적에 비추어 향후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 14. 고령화시대 대비 장년층 디지털교육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디지털 IT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년층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는 익숙하지만 최신 IT기술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교육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우기 어려워져 노인 대상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바일 은행업무, 보안 등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 산간오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순찰정비요원 및 의료봉사, 빨래, 말벗 도우미 서비스 파견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농어촌 산간도서마을의 경우 60대가 최연소일 정도로 대부분 70-90의 노령 어르신들만 계시는 마을이 많습니다. 버스타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젊은 부부들도 살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이 많은데, 초고령화 시대 이농 및 이촌 현상의 심화로 인해서 이렇게 고령의 노인분들만 계신 곳이 전국에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의 마을 시설이 노후화 되어 수리가 필요하지만 노인분들이 하실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는 방법을 알아도 거동이 불편해 그냥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화재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에 가동되어야 할 재난가동 재난대처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더욱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최근 20대 농부, 젊은 농부의 사례가 매스컴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교통이 관찮은 농촌지역에 한정 되고 이런 산간오지는 젊은 분들 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공약에 대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산간오지에도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우선 당장은 최근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운영처럼 이런 노인분들만 사는 농촌을 순회하면서 안전점검 및 비상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관리자분의 파견과 함께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순찰요원, 마을의 시설이나 인프라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요원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모가 조금 큰 마을은 상주요원을 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순회요원이나 마을의 요청이 있으면 출동하는 비상주요원으로 이원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빨래나 방문요양, 말벗, 의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운영한다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오지마을에 보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와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순찰정비요원, 말벗 도우미 파견을 위한 고용이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최근의 농기계는 보다 현대화되고 정밀화해서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고장 시 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정비요원이 지근거리에 상주하면서 무료로 출장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된다면 산간오지마을에 노부모를 두신 분들이 보다 생계에 전념할 수 있어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재원조달방안**

### 〈공적재원 조달의 방안〉

각 지자체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집행으로 회계처리가 되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인력들을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축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농촌테마마을의 원활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관광객 유치와 함께 도시민의 귀촌을 유도하는 등 산간오지마을이 정기적으로 기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라 기대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부담금 경감 등 투입되는 예산보다 재정적 부담을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비영리인 봉사단체,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연계한다면 큰 예산의 집행 없이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공적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방안〉

사업을 통해 발생된 소득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마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여 지자체 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자체 주민에게 전부 돌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면 국세나 지방세 투입 없이 자체적으로도 예산 조달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 🏠 16. 열악한 농촌 교통환경에 대한 대안 - 농촌에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저는 강원도 농촌 지역에 거주중입니다.

이곳의 대중교통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을 간 이동하는 시내버스 딱 한 노선만 존재하는데, 그마저도 작년부터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서 하루에 딱 6회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2시간에 한 번 다니는 시내버스, 이걸 과연 대중교통이라 불러도 되는건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대중교통이 없기에 주민들 다수가 부득이 자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이 곳 농촌에서 위험도가 높음에도 노인 다수가 차나 오토바이 등을 직접 운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대중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성인이라면 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해서 직접 교통문제를 해결하지만, 미성년 학생들은 대중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답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을 위한 대중교통인데, 적어도 대안 정도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대안으로 농촌에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농촌처럼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들에 공유자동차, 공유오토바이, 공유자전거, 공유전동 킥보드 등의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공유모빌리티를 도입하는 것과,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에서 공유모빌리티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농촌에서의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는,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설익은 귀농·귀촌 정책 말고, 농촌지역 대중교통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행 증가 등의 대중교통의 확충이 불가능하다면, 공유모빌리티의 도입을 통한 대안이라도 확실하게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 17. 심각한 자살률을 낮추는 획기적인 제안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 그동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나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분들은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더군요.

단순하게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거나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다시 시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분들을 구제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자살방지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자살을 시도한 분들을 일종의 사회공동체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농촌이나 시골로 보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농사일도 돕고 육체적으로 땀을 흘린다면 삶에 대한 욕구도 생기리라 봅니다.

지금 농촌 일손도 부족한데 어르신들의 말도 새겨듣고 땀의 의미를 안다면 지금까지의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눈다면 뭔가 새로운 세상에 눈뜨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런 식의 대책으로 분명히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회도 밝게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에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상주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되면 심리상담사나 전문가들을 배치하면 더욱 더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체적 노동만큼 삶의 의미를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땀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낸다면 분명히 호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재원은 그분들의 노동으로 농사일을 지으면서 받는 약간의 보수로 충분히 감당이 되리라 봅니다.

저의 제안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경제·민생 분야





## Part 2

## 경제·민생 분야

## 18.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원두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가 연간 13만톤에 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비용만 연 30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활용을 촉진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두커피 수입 증가와 함께 커피박(커피찌꺼기)은 2014년 약 10만 3,000여 톤이 발생한 데 이어 2016년 12만 4,000여 톤, 지난 2018년 기준 13만 6,000여 톤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커피찌꺼기가 늘면서 종량제 봉투 구입에 따른 비용도 23억에서 지난해 3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커피찌꺼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이를 지역구가 수거해 보관했다가 매립 또는 소각합니다. 실제로 커피 원두 중 0.2%만 커피를 내리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간 커피찌꺼기는 일반 생활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고,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은 커피찌꺼기 재활용 대신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커피 찌꺼기의 경우 중금속 등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커피 특유의 향을 갖추고 있어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커피찌꺼기를 새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개선방안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이란 대구시에서 그냥 매립되거나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커피매장에서 수거하여 시민들과 지역농가를 위한 천연비료·버섯배지·반려식물 등으로 재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커피찌꺼기에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이 풍부합니다. 휴과 커피 찌꺼기를 9:1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유기질 함량이 높은 비료가 되며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비료 20톤을 취약 농가에 지원하는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커피찌꺼기 재활용 노력을 통해 대구에 위치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20ℓ) 1만여 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1.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도입!

일단 커피 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스\*\*\*·엔\*\*\*\*·이\*\*·파\*\*\*·탐\*\*\*·백\*\*·카\*\*\*·커\*\*\* 등 8개 커피 브랜드별로 10여 개 매장씩 총 80개 매장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시범사업 매장은 커피 찌꺼기를 전문업체를 통해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면서 커피 찌꺼기와 1회용 컵(종이컵·플라스틱컵), 컵 부속품(뚜껑·빨대·컵홀더 등),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해 찌꺼기 수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게 됩니다. 수거 전문업체는 커피 찌꺼기 분리 수거용기를 각 매장에 보급하고 매장 규모에 따라 주 1회 이상 무상 수거하면서 발생량에 따른 수거 횟수 등을 결정합니다. 수거된 커피 찌꺼기는 퇴비·버섯배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해 커피 찌꺼기 퇴비가 도시농업·공공관리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만든 퇴비로 수확한 쌀과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대구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 퇴비와 버섯배지뿐만 아니라 건축용 자재 등으로 재활용되어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 2. 대구시 & 대형커피전문점 상생협약!

대구 전역의 커피전문점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형커피전문점 양자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으로 커피전문점은 대구시 농가에 친환경 커피 퇴비를 지원하고, 해당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판매에 나서게 됩니다. 대구시는 향후 추가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커피찌꺼기 퇴비를 지원하고, 대구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커피전문점의 가공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커피전문점은 커피찌꺼기 퇴비를 대구시가 지정한 쌀 시범 재배지에 공급해 양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커피찌꺼기 퇴비로 수확된 대구의 농특산물 등이 대형 커피전문점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참여농가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구지역 농가에 커피찌꺼기 퇴비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 3. 대구시 공원 내 정원·화단에 천연비료보급!

커피 찌꺼기를 토양과 혼합하여, 대구시 소재의 공원 내 정원과 화단에 천연비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커피 찌꺼기의 발생량이 점차 빠르게 늘어나면서 무분별하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수거·재활용 체계를 개선시키고자한 시도입니다. 미선나무·영춘화·진달래를 심고 꽃대 자르기, 묵은 잎정리 등 화단정화활동과 커피퇴비를 뿌림으로 그냥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가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지역공원과 도시농업을 위한 천연비료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커피 퇴비, 커피 배양토를 활용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급 대상자는 65살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을 위주로 사회복지부서의 추천으로 100명을 선정해 커피퇴비를 활용한 반려식물 각 2종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려식물은 화훼생산자, 원예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식물 선정위원회에서 아이비, 고무나무, 자금우 등 공기정화능력이 우수하고 관리가 편한 품종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울감 및 외로움 해소와 주변 이웃들과의 친밀감 형성 등 긍정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도시 농업적인 해법으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 기대효과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그냥 버려지는 커피쓰레기를 90% 이상 줄일 수 있고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도 종량제봉투 값을 줄일 수 있어서 지역경제와 지역기업 모두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1회용컵과 부속품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려면 조금은 번거롭겠지만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좋은 정책이므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찌꺼기 재활용 모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배출하는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생활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대구시를 희망찬 그린시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고 매립·소각 등 사회적 비용과 참여 매장의 종량제 봉투 값을 줄이게 되며 관련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대구시 자체를 자원순환도시로 만들 수 있고 주위에서 무심코 버려지던 커피찌꺼기의 가치를 재인식하며 1회용컵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등 생활주변에서 작은 행동들을 실천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커피박(커피찌꺼기)으로 제조한 퇴비는 질소, 인, 칼륨 등 식물성장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여,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고 커피 특유의 향을 품어 친환경 농가에서도 큰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19.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서민들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대비 대출한도를 규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집중단속 하며 집값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서민들 까지 생각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맞는 것인가 의구심은 듭니다.

일례로 2020년 4월 13일은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 놓은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평생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였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집을 줄여 이사한 다음 나머지 자금으로 남편 정년퇴직 후 창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택청약을 오래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남편과 저의 노후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한 달에 십만원씩 딱박딱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요즘 젊은이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로 효과성 높은 재테크 시도하여 원금의 몇 십배 몇 백배 불려가며 살지 못한 것은 저의 미련함 때문이 맞습니다. 융통성 없이 그저 일만 하며 살아온 저의 무능함을 국가에 대고 화풀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이 한평생 집 한 채 겨우 일궈 살아오다 그것을 무기로 뭔가 다른 일을 시도하려 하는데, 시작조차 못하고 24개월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길어질지도 모를 기간 동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버텨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소유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들은 매우 까다로운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집 한 채 팔아보려는 데에도 24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는데,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기존 살던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은 지 몇십년이 지난 노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더욱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하게 팔아치우려면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야겠지요.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해 두어도 집 한번 보자 벨을 누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서민의 살림살이는 당연히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가구 소유자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담보대출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주가 집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살고자 하여 이사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을 실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정말 필요한 국민들은 첨부해야 하는 서류문치가 두툼해지더라도 증빙자료를 모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자 꼬리표를 함부로 붙이지 말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좀 다양하게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한 공약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해보면 계약금 걸고,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비우면서 잔금을 받아나가야 하고, 집을 산 사람은 기존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다못해 며칠이라도 빠르게 집을 비워줘야 간단하게나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러한 과정에 짧게는 수일 길게는 한 달 여 정도 날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잔금을 받아야 집을 비우는 사람들과 며칠이라도 집이 비어야 청소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서로 잔금 치르는 날짜가 맞지 않으면 단기방을 이용하거나 이삿집 보관센터에 짐 전체를 며칠씩 보관하였다가 드디어 이사를 들어가게 되곤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들도 발생하게 되고, 커다란 목돈을 짧은 기간 구해올 수 없는 사람들은 단기방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 잔금 관련하여 짧은 기간 한시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같은 곳을 설립하는 등 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약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팔고 잔금을 좀 일찍 받아 일찍 집을 비우고, 단기방에서 지내거나 이삿집 보관센터에 짐을 보관하였다가 한 달씩 늦은 이사를 감행해야하는 현실에서 부동산 관련 아주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들이 나와 준다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의 효용을 실제 체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면 한층 더 유익하고 풍부한 이사 관련 시스템들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정책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20. 소중한 전세자금, 전세 사기를 막아주세요

집값 상승으로 대부분의 50대 이상에게는 부동산이 재산의 전부이고, 젊은 세대는 자기 집 갖기가 어려워 많은 이가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세 사기(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거나, 중개업자에게 사기 당함)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없는 이의 전 재산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일부 집단의 이기적인 행태를 막아 줄 법률(공약)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1. 중개업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 받아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양한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집주인으로 위장, 많은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금을 가로채 도망가는 경우
2.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위조로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전세 입주자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돈이 없어 저렴한 전세로 급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를 응징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임차인을 기망한 임대업자나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사회초년생 등이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학교 근처 원룸업자가 대학생들 상대로 전세금을 탈취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업자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울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죄를 사전에 막고, 전세사기에 강한 응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물 실소유주와 계약자의 명목이 같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사전에 할 수 없고, 임대인이 기한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조속히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보호 방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 전셋집에서, 평범한 직장인

## 21. “소상공인 살리고 지역경제 올리고” 제안

### 🔍 제안이유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소중한 퇴직자금으로 또는 수년간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목돈으로 개업을 하였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아 하루하루 전전공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찾아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이 전무하므로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일명 “소상공인 살리고 지역경제 올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코칭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본 공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기존 공약들의 문제점

선심성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거대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은 준비하나 소규모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이 없음.

## 🔍 주요내용

- ① 현재 사업이 부진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조건을 검토한 후 혜택을 받을 분을 선정하여 성공한 지역 자영업자와 연결해 코칭을 받게 합니다.
- ② 자영업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일대일로 사업전략 실무코칭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 형식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지원자에게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 부진으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코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예상 운영비용 및 자금조달방안

전문가 3명 채용 기준, 부대비용 포함 1년에 3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달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여러 사업을 조정하여 확보되는 재원을 “소상공인 살리고 지역경제 올리고” 사업에 충당 하도록 합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역에서 성공한 자영업자와 사업이 부진한 사업자를 연결하여 코칭을 받도록 한다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여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대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 🏠 22.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조화된 지역상권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 현황 및 정책의 목표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축제나 인프라 조성, 현대화시설 구축의 면면들을 보면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千篇일률적인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각 지역별 특징을 살려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의 축제나 문화 콘텐츠와 잘 연계시킨다면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마을 특유의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전문가들의 기획 그리고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찾는 테마형 전통시장 구성 및 젊은 인재들도 참여하는 보다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 🔍 정책 실현을 위한 로드맵

### 1. 각 전통시장의 특징을 잘 살린 전통시장 만들기

성북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은 정릉시장, 길음시장, 돈암시장 등이 있습니다. 각 전통시장의 지리적 입지와 특징을 잘 살리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① 정릉시장의 경우 북한산 국립공원과 가까워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자주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 특징을 살려 맛집이나 특산물구매,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특화시키고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특성상 부담 없이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이쇼핑(eye shopping) 하기 좋은 곳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산 소재 사찰들과도 가까워서 이 전통 사찰들과 연계한 이벤트(EX. 사찰음식 시식 및 판매, 문화체험)를 기획하거나 쇼핑과 함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특화된 마케팅 및 이색체험 관광코스의 구성,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② 길음시장의 경우 오랜 역사의 전통과 구도심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대적인 감성으로 잘 해석한 뉴트로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30-4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상점이 또한 오래된 가게 및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그런 옛 모습이 잘 보존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및 상점거리를 조성하도록 제안합니다.
- ③ 돈암시장의 경우 인근 성신여대 고려대 국민대 한성대 등 대학가와 인접해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 전통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커피숍, 간단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 20대들이 자주 찾는 빈티지 편집숍을 유치해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날로그 감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층들이 IT기기 사용과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는 특징을 잘 반영해 100% 신용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전통시장을 구축하고, IT기술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IT모범 전통시장'이 되도록 시장 전체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한편 시장 상인과 고객들 모두 편리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성북구 마을 축제와의 연계

성북구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마을 축제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한마당축제, 음식축제, 다문화축제, 문화축제 등 여러 축제들이 수시로 열리는데 그 축제공간의 장과 이벤트 기획을 전통시장과 연계시켜 보다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축제가 일회성 단발성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살아 숨 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전통시장으로 초대해서 전통시장이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우리 삶과 아주 친숙한 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 3. 성북구 전통시장 전용 어플의 설치

전통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지척인 거리에 전통시장이 있더라도 한 번도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전통시장을 신문이나 뉴스 또는 교양 오락프로그램 그리고 SNS채널에 많이 노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장 풍경이 동영상 파노라마나 사진의 형태로 더해지고, 시장 골목 구석구석이 현장감 있게 보여지고, 시장 상인들의 훈훈한 인심과 삶의 단면을 잘 보여줌으로써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시장,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함께 가던 그런 시장의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SNS채널을 통해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성북구 전통시장의 전용 어플을 출시 해서 많은 분들의 사용을 장려해 주세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함께 즐기고, 놀고, 머무는 곳으로 인식할 필요성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면서 지역민과 화합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4. 전통시장 가맹점 포인트제 혜택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일리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매고객들에게는 알뜰한 쇼핑, 가성비 좋은 시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에게는 단골 고객 확보 및 보다 많은 고객들이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 5.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구축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소비자들의 이유를 분석해보면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쇼핑을 하기 위한 주차공간의 부족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사는 과거의 소비패턴과는 달리 현대의 소비트렌드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필요한 것을 사다 놓는 대량구매 형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 물품의 적재나 가족 동반 등을 위해 차량 쇼핑이 일반화된 지금 마땅한 주차공간의 구비 없이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인근의 공터나 기타 가용공간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도로변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주차가 불편해서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사례가 없어져야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주차 안내 및 다양한 홍보와 광고도 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 정책실현 기간 및 소요예산

### 1. 전통시장 리노베이션 및 와이파이 구축 사업

리노베이션은 상인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역별 로테이션으로 인프라 설치 및 조성사업을 실시하며 대략 10억 정도의 예산소요가 예상됩니다. 와이파이 구축은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에 특별한 예산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마을축제 연계 및 예술가 초빙

공모사업을 통한 기획사 선정 및 예술가 초빙 인건비: 각 전통시장 당 연 2억

### 3. 전통시장 전용 어플 출시

지역SW성장지원사업 연 2억

### 4. 전통시장 가맹점 포인트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지원 선정을 통한 예산 조달

### 5.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구축

주차장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거나 운영비용을 상인들에게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주차 서비스로 판촉활동도 병행하면서 주차장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는 것에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별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기대효과

상인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기획력을 가지고 여러 모험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 그 전통시장은 충분히 대형마트와 견줄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조화된 지역 상권 육성을 통해 우리 마을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전통시장 이용자 수 증가 및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고객들의 신속하고 알뜰한 상품 구매를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우리 지역의 명소를 찾는 분들을 더욱 늘릴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 🏠 23. 사고파는 집이 아닌 살아 갈 집이 필요합니다

### 🔍 집을 사재기 할 수 없는 정책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정책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 담고 살아야 하는 집이 집 있고 돈 있는 자들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을 엄중히 가려 주시고 세금이나 법적인 제재 여러가지 방법으로 집이 더 이상은 투기의 대상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 임대주택, 아파트의 규제를 다각화

노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혹은 자녀가 많지 않거나 하면 사실상 임대주택·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바늘구멍입니다.

1.2인의 단출한 가족 구성이 많아지는 요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규제가 조금 더 개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점수제도로 인해 임대주택 분양 순위에도 낄 수 없는 집 없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노령자, 장애인의 경우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소 생계비 밖에 벌지 못하고 주거문제로 몰락하고 있는 가정들도 돌아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전·월세 보조금과 대출

열심히 일해도 집의 월세 혹은 대출 등의 문제로 곤궁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차원의 보조금이나 대출이 지원 되었으면 합니다.

대출 이자금도 정말 서민에게는 커다란 문제로 남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합당한 보조금과 대출을 지원해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될지 그저 평범한 국민인 제가 알 도리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도 해결 되지 않았던 주거문제, 이제 지치고 힘에 부치기만 합니다. 본디 가난했고 열심히 일해도 집 문제로 더욱 가난을 면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도 없는

저같은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을 가진 자를 위해서가 아닌 집이 없어 해매는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좋은 공약과 정책이 생기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아도 전·월세금에 매일 울어야 하는 사람들.

재산으로 어떤 목적으로 내 집을 가지고자 함이 아닌 그저 발 뽀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란 단어 그대로의 집을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이 집이 되어주게 해 주시길...

수많은 유권자들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 24.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 설립 제안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 설립을 희망합니다.

최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층간소음, 거주지 내 흡연, 반려동물 소음 등등 공동생활에서의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심하게는 살인사건까지 연결 되는 것을 기사를 통해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 설립을 희망합니다.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는

1. 해당 사안에 관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합니다.
2. 1차적으로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개선사항이 없을 시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3. 피해자와 가해자 의견을 종합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해 원만한 상황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4. 특정인이 유발한 문제가 확실할 경우 불문 경고를 우선하고, 경고누적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합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법에 대한 건은

‘주거관련 민원담당 전문기구’가 민간기구 또는 정부기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공약을 통해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상승 시킬 수 있으며, 사건 또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공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5.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 해결방안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는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많은데 대부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부분의 TO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인력공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줘야 할 우리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직희망인재들의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그 횟수를 늘려서 그간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을 불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우수한 복지제도의 중소기업, 그리고 미래비전 있는 강소기업이 많다는 점을 청년인재들이 직접 탐방해보고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전망과 기대효과

이런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인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젊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재확보의 유연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 이유는 꼭 급여 때문만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야 중소기업을 찾는 인재들이 늘어날 것이고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선순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 구직자 외에도 부모님과 가족들 대학이나 고교의 취업담당 교직원들도 함께 초대해 우수 중소기업을 견학시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 함께 동참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어 현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인재의 채용과 더 나아가 역외 인재의 유인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들의 경우, 일회적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청년인재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필요조건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체 인력시장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산조달 방안

이런 일련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이 확대되리라 예상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청년 고용촉진 지원사업 등과 합치되는 부분이 많기에 예산 확보 및 편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단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곳이기에 R&D 지원 예산의 증액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이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26. 비정규직 차별·착취 없는 희망찬 대한민국 실현

### 🔍 제안이유

비정규직 차별 및 착취가 없는 비정규직 제로를 통한 희망찬 대한민국 실현

### 🔍 주요내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직급, 성과급, 퇴직위로금 등 여러 측면에서의 차별 행위가 만연함.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문화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당장 개선되어야 함

### 🔍 실천방법

1. 비정규직의 직급, 임금, 복지, 성과급, 퇴직위로금 등을 정규직과 동일화 하도록 법제화 함
2. 비정규직의 비율을 공기업, 대기업은 3% 이내, 중소기업은 10% 이내로 제한 함.
3. 각 회사의 비정규직 비율 공개
4.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경력 산출에 따른 직급, 연봉, 복지, 퇴직위로금의 지급 사항을 공개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감사함.

## 🔍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시 현재(월 최대 60만원/연 최대 720만원 지원) 유지 및 세제 혜택

## 🔍 자원조달방안

기존의 노동부 지원금을 활용하며 기업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 활용 유도

## 🔍 기대효과

비정규직 제로로 고용이 안정되면 젊은층의 결혼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출산율도 높아지며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수익이 안정되어 외식, 레저활동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수익이 증대되어 경제가 활성화됨.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도로 고용이 안정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함.

비정규직 제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우리의 삶, 복지, 소상공인, 기업,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27. 독도 디자인센터 구축

### 🔍 제안이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도를 직접 방문하게 하는 것이지만 지리적 위치나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독도의 아름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독도 디자인 센터를 건립해 의류, 액세서리부터 캐릭터까지 다양한 독도브랜드상품이 태어나는 독도 콘텐츠의 요람으로 만들어 독도를 직접 찾지 않아도 세계인들이 독도를 입고, 신고, 감상하고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추진방안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이 엔젤피쉬를 닮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동해 먼 바다에 외롭게 떠 있는 독도를 엔젤피쉬를 닮은 섬으로 브랜드화하고 브랜드상품을 비롯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독도라는 브랜드가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만들겠습니다.

## 🔍 소요일산 및 재원조달방안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의류와 액세서리, 캐릭터 분야의 디자이너를 선발해 시제품 제작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후 상품이 출시되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점차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향후 독도 브랜드가 독도 디자인센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제품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업체나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업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 28. 관광통역안내사의 특수고용직 인정을 제안합니다

저는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이나 노동자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 중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의 고통은 극심합니다. 어디 이것 뿐인가요? 가이드는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정치리스크, 전염병, 대외신인도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이 이 업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어가이드는 사드때문에, 일본어가이드는 외교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고통을 겪어 왔지만, 조금 회복 될려하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 왔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생계가 어려워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이드들을 위한 사회 안전장치는 전무합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 우리 같은 프리랜서 가이드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특수고용직을 인정받지 못해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실직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이번기회에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들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아 사회안전장치 안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9. 천안 시내버스 관련 희망공약 제안

인구 100만도시를 꿈꾸는 천안시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라는 짧은 버스운행시간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 불편함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제안합니다.

### 1. 천안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을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길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 인구는 약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합니다. 저의 경우, 밤 10시에 일이 끝나고 귀가 하려면 버스가 단 한대도 다니지 않아 불편합니다. 100만 도시를 위해 버스 운행시간부터 연장해야 합니다.

### 2. 중복 노선 폐지해 주세요.

천안시에는 중복되는 노선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로 160번대 노선 입니다. 166번을 제외한 모든 160번대 노선은 저수지를 경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입니다.

이런 중복노선을 정리하면 노선 중복 비효율도 제거하고 버스 노선도 헛갈리지 않을 것이기에 중복 노선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 3. 학생수송 노선은 학생수송을 마치고 다른 노선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운행 노선은 학생수송을 마치고 다른 노선으로 운행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주말에도 유용하게 운행돼서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 4. 동남구 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들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서북구 지역에 비해 동남구 지역이 버스가 열악합니다. 동남구 지역 중에서도 600번대 노선은 도착 시간도 표시되지 않고 하루 27회 밖에 운행되지 않습니다. 청수행정타운을 경유해서 광덕, 풍세지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동남구 지역 버스 노선을 개선해 주시고, 600번대 노선도 배차간격을 최소 15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5. 수도권 전철과 환승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전철로 천안시에 많은 인구가 방문하는데 버스와 환승이 안되네요.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의 환승을 부탁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교육·환경 분야





## Part 3

## 교육·환경 분야

## 30. 갭이어(Gap year) 정책 시도

우리 사회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공부에 집중하여 치열하게 보내며 학생들은 당연하듯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대학교는 그저 유명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곳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목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알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성적에 맞춰서 가거나 그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대학교를 결정해 대학 진학 후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 사회에 갭이어(Gap year)가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갭이어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1년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험(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인턴, 창업 등)을 쌓으며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갭이어를 가지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인턴 기회를 준다던가, 모여서 지역 성장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할 기회와 도움을 주세요.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갖고 자기들의 꿈을 세세하게 생각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학생, 청년들과 소통하며 함께 젊고 앞서나가는 비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희망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은 많지 않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어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패하며 배운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밀도와 경제적 격차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은 꿈을 처음부터 조금 더 올바르게 심어 주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31. 국가와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아래 제안은 국가와 지역의 도서관 전체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 🔍 도서관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에 앞장서 주십시오.

도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충실한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만들려면 관련 법률과 각종 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여러 법률과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서관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도서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도서관법」과 「대학도서관진흥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법」은 물론 도서관 활동에 관계되는 「독서문화진흥법」, 「저작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과 교육부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2019~2023)’과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2019~2023)’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 계획 등이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 시행과정을 국회에서 성실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 공공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은 국민들 삶 속에서 가장 가깝고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화기관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약 2만 곳이 국민에게 지식과 문화를 언제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도서관은 국민의 요구 수준이나 경제 역량 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문화시설도 공공도서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도서관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충분히 설립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도서관 자료 확충이 도서관과 지식산업, 출판, 서점계 등에 모두 이익이 됩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책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지식과 연구, 문화 활동 등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민들은 도서관이 충분한 책과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도서관은 책뿐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과 정보 자원을 충실히 갖추고 시민들이 언제나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책과 다양한 자료를 더 많이 구입하고

확보하는 것은 도서관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과 창조산업과 출판, 서점업계의 활성화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현 수준에서 3배 증액한 3천억 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자료구입에 사용하도록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책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도서관이나 연구도서관은 고가의 전자저널을 국가 라이선스 방식으로 구독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서 등 도서관 운영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사서 등 전문인력이 책과 자료를 매개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사서 등 전문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국민들은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에서 사서 등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은 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고 안정성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지식문화기관인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서 등 전문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도서관은 좋은 사서 등 전문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사서 수의 약 20% 정도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도서관은 꾸준히 늘어나도 사서 인력은 증가하지 않아 도서관 운영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인력배치에 관련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재정을 충실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2. 학교 밀집지역 수일로(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아이들 꿈이 자라는 공간으로

### - 장안구 송죽~파장 수일로 일대 안전거리 만들기 -

#### 🔍 제안 이유

장안구 조원동 수성초등학교~파장동 수일초등학교까지 2km가량 거리에 총 9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도 상당수 위치해 있음. 여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에 들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초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는 과속 및 주정차

단속 위반 CCTV 설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 구간을 수원시+도교육청+지역주민+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해 '(가칭)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으로 지정해 도로 및 각종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 사업 세부내용

-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  
일대 대부분 학교는 수일로와 맞물려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수일로 학교 인근 도로 2km구간을 '특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그동안 각 학교별로 설치된 CCTV, 신호등, 인도, 분리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충.
- 교육 기반시설 설치  
현재 이 일대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대추골도서관이 사실상 유일. 이에 방과 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쉼터, 주말이나 방학 등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도록 함.

## 🔍 예산 확보 방안

- 교통 분야  
각종 CCTV 설치 등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사업을 추진 중이라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도로확충 사업 등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되지만 이 일대는 주택지라 도로 확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최대한 변경해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대규모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기반시설 확충  
신규 시설을 건립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감.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내 공실을 적극 활용하여 교실 구조변경 비용만 확보하면 지출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예** 수일초의 경우 불과 10년여 만에 학생수가 800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감소함. 때문에 이에 맞춰 구축된 학교 각종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꿈동산 프로그램 운영  
각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여기에 더해 시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형식의 캠페인을 활성화 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 함.

## 🔍 추진일정

- 2020년 12월: 민관협으로 아이들 꿈이 자라는 공간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
- 2021년 ~6월: 해당지역 학교 주변 현황+학교별 공실 등 활용 가능 공간 전수 조사 실시
- 2021년 ~12월: 필요 예산 산정 및 자치단체 광역단체 예산 반영
- 2022년 ~6월: 기반 시설 확충 사업 실시 및 학교 시설 구조변경 실시
- 2022년 하반기 사업 시행

## 🏠 33.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연기로 인한 보충교육제도 실시

### 🔍 제안 이유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사일정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시기에 맞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맞물려 현실적으로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적절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충교육제도 내용에 대하여 희망공약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 주요내용

#### 1. 정책의 목표

제가 제안하는 희망 공약은 청소년들의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2. 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청소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청소년(중위소득 50% 이하)
- 3순위 - 중위 소득 120% 이하 청소년
- 4순위 - 그 외 청소년

### 3. 정책실행과정(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복지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도입하여 민간기관과(학원, 체험학습시설 등)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1인당 민간교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바우처)을 주고, 학교교육 시간 외에 본인에게 필요한 보충교육이나 적성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학습시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기관협력에서는 전자 바우처를 통해 학생들이 보충교육을 희망하면 사용한 시간을 결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 4. 정책달성 필요기간(언제까지 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학사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감안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정책달성 목표기간을 잡는다.

### 5. 소요되는 자원 및 자원조달 방법

초·중·고 수업일수는 190일이며 개학을 연기한 이후 감축한 수업일수는 약 19일이므로, 1일 당 약 6시간 정도로 하여 1인당 총 114시간으로(19d × 6h) 바우처를 제공하여 학생들은 114시간 가량 자신들이 원하는 민간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관에서는 1시간당 최저시급 기준으로 총 972,42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기관에서의 사용된 비용은 교육부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인원수에 따라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코로나19로 민간기관인 학원이나 자영업자(체험활동이 가능한 장소 등)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 청소년들이 2020년에 받지 못하였던 수업일수를 자유롭게 보충교육이나 체험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장시킬수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4. 과도한 졸업인증제 제한안

### 🔍 제안이유

‘졸업인증제’는 전국 대다수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어, 소프트웨어, 사회봉사, 특정 강좌 이수 등에서 일정한 업적을 달성해야만 학생의 졸업을 인가하는 제도이다. 학생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무방하다고 판결된 종교학교의 종교수업 의무화 문제와는 달리, 졸업인증제의 경우 대다수의 대학이 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선택권과 수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다. 졸업인증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외국어, 사회봉사 등을 요구하는데 각 영역별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 강제화

-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학생들의 전공이나 취업, 취업 이후 실무와 무관한 경우가 다수  
**예** 한문교육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 등 기성의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 소프트웨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좋은 수업이 의무화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전공과 괴리감이 클수록 학습부담 증대. 사교육 유발.

#### 2. 사회봉사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졸업을 위해 사실상 반강제되고 있음.
- 학교당국 및 행정당국의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노동 강요, 사전 동의 없는 주말 출근 등의 불편사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이 봉사활동 이수 여부에 학생의 졸업을 걸려있다는 사실을 볼모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스스로 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학교당국에서 지정해준 봉사단체에서의 봉사만이 인정되는데, 봉사활동 기관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봉사활동 단체에서 봉사자에게 직원들의 고유 업무를 떠넘겨 직무유기 현상이 발생함. 이에 학생들 또한 봉사활동을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가 아닌 공무원에 대한 봉사로 여기는 관점이 일부 존재함. 이는 명백히 봉사활동의 취지를 왜곡한 것임.
- 대학생들의 전문성 및 전공적합성을 일체 무시한 청소봉사, 도서관 서가정리 등의 봉사가 난립하고 있으며, 기관이 이를 인건비 감축용으로 남용하고 있음.

### 3. 영어전용강좌 수강 의무화 및 영어성적의 졸업인증제화

- 영어전용강좌의 경우 현행 고교교육과정에서 대비한 바 없는 경우로 학교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어전용강좌 수강을 위한 학내 영어실력 향상 강좌 등이 상당히 부실함. 교내 교양강좌를 통하여 학교수업 안에서 성적을 올림이 이상적이거나, 상대평가제의 특성상 교내 영어강좌 대다수가 유학 경력자 및 어학특기자의 소위 '학점따기용'으로 전락해 실제 영어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
- 학내 영어성적 향상 정책이 상당히 부실함에도 학생들에게 일정한 영어 수준을 '알아서 만들어오라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상당히 부적합함.
- 학내 어학원, 영어강의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관련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인 교수와 한국인 학생이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실력이 부족한 교수의 경우 강의에 상당히 애를 먹으며, 학생들 또한 이해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낌. 이로 인해 전공지식 습득에 상당히 난관을 겪고 있음.
- 전공지식이 아닌 영어실력이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의 수업참여도가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에 맞게 스스로 수학계획을 설계해 나갈 권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유 기반의 진로선택과 수학 하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 발휘가 극대화 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 제31조 4항에 보장된 바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졸업인증제는 대학운영의 자유를 넘어 획일적인 학습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진로선택 등에 대한 권리를 일률적으로 침해하며, 침해의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다수의 대학들은 타 대학과의 경쟁 등의 이유로 졸업인증제를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졸업인증제의 부담이 현 상황에서 더해진다면 사학운영의 자유가 과잉보호되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649 판결에 수록된 보충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능력과 의사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졸업인증제의 경우 대다수 대학이 시행하는 바, 수험생의 원서 접수 시 졸업인증제로부터의 선택권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능력과 의사에 따라 교육받는다라는 헌법원칙에 불합치하다. 또한 졸업인증제는 교육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는 일괄적인 수요 늘리기 정책에 해당하는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에 국가가 나서서 학생들의 학습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졸업인증제에 대한 대대적인 제약과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 주요내용

### 1. 졸업인증제 실시에서의 학생 선택권 보장법안

각 대학에서 시행하는 졸업인증요건으로 학교가 제시한 다수의 졸업요건 중 학생이 한 개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함. 단 졸업 평점과, 졸업 학점제는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논외로 한다.

#### 예 H대학교 기준

- ① 5회 이상의 영어전용강좌 필수 이수
- ② 인턴십 이수 의무제(인턴십 기관은 학교가 선정)
- ③ 전공과 무관 한 필수과목 이수(창의적 컴퓨팅/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등)
- ④ 사회봉사(봉사 기관은 학교가 선정)
- ⑤ IC-PBL 수업 필수이수(시행 예정)
- ⑥ 특정 영역의 교양 필수이수(인문, 사회, 과학, 소프트웨어, 창업 등 고르게 이수)

이 요건 중 1개를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함.

### 2. 과잉된 졸업인증제 실시의 금지

각 대학이 실시하는 졸업인증제가 전공과 무관하게 학업 및 학생생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학의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등)은 교육부에 졸업인증제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교육부는 학생의 선택권이 과잉 제약된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학생의 학습부담이 과도하게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졸업인증제의 시행에 대한 유보를 시행하고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3. 인턴십 및 봉사활동 등 학교를 통한 인력파견 제한

- ① 졸업인증제 하에서 학교의 중개 통한 인턴십 및 봉사활동이 유일한 이수경로일 경우, 봉사기관의 리베이트, 친인척 기관에 봉사자 꽂아주기 등의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이에 졸업요건 중 인력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분야는 대학 차원의 중개를 금지함.

- ② 대학이 주선하는 인턴십 및 사회봉사가 유일한 졸업인증요건인 경우를 금지하며, 대학이 주선하는 방법 이외에도 학생이 개인적으로 봉사시간 등을 충족해서 오는 방안도 허용해야 함. 단 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봉사활동 기관을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는 있음.
- ③ 대학이 봉사활동 기관을 추천할 경우 파견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와 학생 인터뷰를 병행하여 부적절 업체의 경우 추천을 중단해야 하며 관계부처에 고발해야함. 또한 봉사기관의 부적절한 처우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의 봉사기관을 즉각 변경하며, 현재까지 이수한 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만일 봉사기관을 변동하지 못할 경우, 분할 이수 등의 방법 또한 허용해야함.

### 🔍 소요예산

없음

### 🔍 재원조달방안

불필요함

## 🏠 35.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과 예절 교육을 위해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 🔍 정책의 목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남에게 보여주어도 부끄럼 없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 🔍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와 예절

우선 아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 초등 저학년생: 37.8% - 2015년보다 12.3% 증가
- 초등 고학년생: 81.2% - 2015년보다 21.9% 증가
- 중학생: 95.9% - 2015년보다 9.3% 증가
- 고등학생: 95.2% - 2015년보다 5% 증가

이와 같이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초등 고학년생은 3년 사이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초등 저학년생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랭킹에서 최상위권에 랭크가 되어있으며 공공 wifi 및 통신사 전용 wifi를 도심 내에서나 외각 지역에서까지 볼 수 있으면서 LTE대역망이 잡히지 않는 곳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인터넷 보급률에 비해 인터넷 문화와 예절이 뒤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기사나 개인 SNS 댓글에 달리는 성적 댓글 및 악플에 의해 공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2018년 기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15,926건이고, 유튜브에는 청소년이 보기에 불건전한 콘텐츠가(심한 욕설, 성적 콘텐츠) 매일마다 새롭게 올라오며, 포털사이트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 서로 욕설을 끊임없이 주고받거나 상대를 조롱하는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꺾끄러운 문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예절은 어떨까요?

인터넷 예절은 제가 위에서 말한 인터넷 문화와 서로 문제점을 보충해 나가며 발전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깨끗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으니 인터넷 예절 또한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을 것이죠.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며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 문화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인터넷 문화와 예절의 수준이 뒤쳐지고 퇴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다른 아닌 1순위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인터넷 댓글의 조롱과 험담 때문에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배우를 알고 계십니까? 악플로 인해 고통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국민들이 악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사고가 터져서야 관심을 기울이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익명성 아래 키보드 자판으로 두들기는 말 한 마디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람이 죽을 정도면 이미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와 예절은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미 없어지고 말로만 남은 인터넷 문화와 예절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말로밖에 전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하였습니다.

## 🔍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

1. 첫번째로는 청소년 네티켓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입니다.

인터넷 문화와 예절이 발전되어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정보통신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네티켓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스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형태의 수업 3가지 종류 뿐이며 온라인용을 제외하고는 홍보영상과 요약영상 뿐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교육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네티켓 교육의 실태는 어떨까요? 네티켓 교육이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덕책에서 잠깐 가르쳐주는 것 외에 따로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않습니다. 코딩교육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네티켓 교육은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아 네티켓 교육에 대해 강화가 첫번째로 필요합니다.

2. 두번째로는 올바른 인터넷 매체에 대해 알려주는 전문교육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만 청소년들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현재의 인터넷 문화가 나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헷갈려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인터넷 문화와 예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청소년들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청소년들 모두 올바르지 않은 인터넷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정상적이고 깨끗한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3. 세번째로는 네티켓 교육에 대한 활발한 마케팅 활동입니다.

네티켓 교육이 의무화가 된다면 학생들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와 예절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는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대가 공존하기 때문에 네티켓 교육을 의무화해도 인터넷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약의 목표는 청소년의 네티켓 교육 의무화가 아닌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알려주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제공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네티켓 교육의 의무화를 활발히 알리게 되면 현재 인터넷 문화의 실태를 자세히 알리게 되며 인터넷 이용자들은 청소년의 네티켓을 본받아 올바르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청소년에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 🔍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의 역사는 짧게 보면 5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문화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현재 중고등학생들 모두 네티켓 교육을 받아야지만 근본적으로 인터넷 문화와 예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정책 달성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하게 된다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후에 다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 자원 조달 방법

소요되는 자원은 현재 소요되는 예산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무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코딩교육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코딩교육의 예산을 가져와 정책을 실시하면 큰 부담 없이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조달 방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SW시범학교 선정지원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 36.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조치와 사후예방 제안

몇 년 전부터 학교폭력의 수준이 점차 도를 지나쳐 간다고 생각합니다.

‘축법소년제도’로 인해 초등학생이 친구를 죽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어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축법소년’ 대상의 연령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을 가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학교폭력은 견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고 결국 우리 사회는 청소년범죄를 그냥 수수방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징후가 보였을 때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랑만 주다보니까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해도 내 자식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문제를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강력하게 선행조치를 하고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과 지역사회 및 학교가 2차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퇴학이란 학교정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매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경찰에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 형사처벌이나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부분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부모님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 강사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거나 또는 관련 범죄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의 재판과정을 보거나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그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가 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제와 외교, 행정,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늘 선거를 할 때면 최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후보자는 피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새겨 정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37.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약

### Q 공약 배경

지구 온실효과의 주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석연료 자동차임은 불문가지의 사실임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을 공약하게 되었습니다.

### Q 공약 내용

전기자동차가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가격 자체가 고가인 것도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 Q 실천 방안

- ① 화석연료구동 자동차를 처분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기한을 정하여 획기적인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대체가격 절반 이상 지원, 자동차세 절반 이상 감면 실시,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인하 등의 보상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운행자에게만 특별 교통법규위반 단속 권한 부여하여 이른 바, 카파라치 신고보상금 부여 특별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자동차의 규정 속도 운행을 핑계로 위협운전을



하는 화석연료구동 과속 자동차 운행자를 적절히 제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② 국내 모든 주유소 및 가스 충전소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 ③ 전기자동차 충전전기요금을 일정기간 동결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활성화 될 경우 전기요금도 덩달아 상승하여 전기자동차 연료비절감의 이익이 상쇄될 것이라고 하는 세간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④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화석연료구동 자동차의 운행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석연료구동 자동차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더 크게 높이고, 공공주차장 주차 및 주차구획선 주차 행위 등을 금지시켜 나가야 합니다.(대중교통차량 및 화물차량은 일단 예외로 합니다.)
- 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주차 시 완전무료화를 실시하고, 화석연료구동 자동차 운전자가 무단 주차하는 경우, 카파라치 신고제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신고보상금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 ⑥ 1세대 당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를 한 대 이상 겸비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가 화석연료자동차 한 대만 보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 대 이상은 전기자동차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화석연료구동 자가용 자동차가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보유 숫자가 늘어나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⑦ 태양열로 전기를 충전해서 구동하는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환경 개선보상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 ⑧ 위에서 열거한 모든 제도는 영원히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까지 전기자동차 이용이 활성화 될 때까지만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국가재정고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 🔍 기대 효과

전기자동차 보유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을 통하여 화석연료구동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8. 기존에 사라졌던 버스정류장 쓰레기 분류함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 🔍 제안이유

버스 내 테이크아웃 음료 반입이 불가능하여 버스정류장 곳곳 발견되는 쓰레기 버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마다 쓰레기 분류함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 🔍 주요내용

#### 1. 목표

버스 정류장 의자, 바닥 등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없애기!!

#### 2. 과정

쓰레기 분류함을 남은 음료를 처리하거나 다 먹은 테이크아웃잔을 버리기 위해 전국 버스정류장마다 3개월 내로 설치합니다.

#### 3. 결과

버스정류장 환경 미화에도 도움이 되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쓰레기 분류함을 청소하기 위한 미화원 고용으로 일자리도 확대!!

### 🔍 소요예산

전국 버스정류장에 쓰레기 분류함 설치 및 쓰레기봉투 비용과 환경 미화원 일자리 예산까지 1개의 시·도당, 1억 2,000만원씩 17개의 시·도에 총 20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자원조달방안

환경부에서 지원하여 자치 시·도의 환경 예산으로 쓰레기봉투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재단을 통한 환경 미화원 고용비용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39. 흡연부스 설치 제안

### 제안이유

역 앞 아무데서나 흡연하는 흡연자들 때문에 노약자, 아이들, 임산부 등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역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담배꽂초들 때문에 외관상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줍니다. 몇몇 역에는 흡연부스가 있어서 흡연부스가 없는 다른 역들에 비해 냄새가 덜하고 담배꽂초도 그쪽에만 모여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

#### 1. 무엇을

역 앞마다 흡연부스를 설치

#### 2. 어떻게

역 앞 구석에 최대한 공간을 만들어 자리가 좁은 지역이면 작게라도 설치

#### 3. 언제까지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범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2023년까지 수도권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

### 소요예산

하나의 흡연부스 당 100~300만원의 비용소요 예상, 다수 업체들을 비교해 가성비 좋은 업체 선정

### 자원조달방안

각 시·군·구에 협조 요청

## 40. 종이테이프, 친환경 충전재 사용 확대 제안

요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 되면서 생활쓰레기는 너무나 늘어가고 있는데 그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가보면 택배 상자가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그 택배상자에 비닐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배달을 위한 비닐 충전재나 스티로폼 등도 눈에 많이 보이는데 안전하게 포장을 하기 위해 충전재를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이것들이 결국 다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택배 발송 시 종이테이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요즘 옥수수전분처럼 물에 녹는 충전재를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적인 충전재들을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사항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업계의 자율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택배 배송 이후의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홍보·교육 등을 통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4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 주요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이란 대구시의 인공구조물 또는 도심담장에 이끼를 심거나 이끼벽을 설치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미세먼지를 친환경적으로 줄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여전히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미세먼지마스크·공기청정기도 활용되지만 요즘에는 ‘이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작가 하즈미 나오미의 『나의 작은 이끼 정원(라의논, 2018)』에서 이끼는 일반적인 공기정화식물의 무려 800~1,000배 넘는 공기정화 효과가 있으며,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 발생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끼는 다른 식물들보다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습기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천연 공기청정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오슬로와 피라, 브뤼셀,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나무를 대신해 공기를 정화하는

이끼벽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이끼벽을 적극 활용하면 녹지를 새로 꾸미지 않고 기존 공간을 이용해도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끼벽을 활용한 그린인프라 구축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 개선방안

### 1. 친환경 공기청정기 이끼벽 설치!

대구시 도심 곳곳에 허름한 벽, 어둡고 차가운 골목길, 회색빛 도로와 삭막한 거리에 가로·세로 1~2m의 크기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이끼벽을 설치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벽이나 인공 구조물에 촘촘히 박힌 이끼식물들이 대기 중 미세먼지를 받아들여 50m 이내의 대기를 청소하게 됩니다. 이끼는 일반 나뭇잎보다 표면적이 넓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면의 식물을 이끼로 한 것도 뛰어난 공기 정화 능력 때문입니다.

특히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차량 통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에 이끼벽과 가로수 등 양쪽 도로변에 이끼녹지를 조성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약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에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높은 이끼나 아이비, 주목 등을 심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더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파트 벽면과 입구, 1층 정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이끼 식물을 심었더니, 초미세먼지 수치가 약 37%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확실한 효과를 증명해보였으며 도로의 경우, 방음벽이나 중앙 분리대에 이끼 식물을 입혀보니 초미세먼지가 최대 38%까지 감소했다고 하니 녹지를 새로 꾸미지 않고 기존 공간을 이용해도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2.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대구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인증제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150세대 이상 규모의 기존 공동주택과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입니다. 인증을 위해 대구시에서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이끼벽 설치 및 담쟁이 덩굴 등 식물을 식재하는 아파트 벽면 녹화(1~3층) △경로당 및 어린이집 내부에 공기정화식물 이끼벽 설치 △동별 출입구에 에어샤워기 및 에어흡입매트 설치 △차량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에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시스템 설치 △광촉매 페인트 사용 및 건물외벽 롤러(붓) 방식 도색 등입니다.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 3개 이상을 실천한 기존 공동주택과 5개 이상을 실천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으로서의 자격을 인증하게 됩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 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인증로고를 설치해주게 됩니다. 기존 공동주택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을 심사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인증로고를 설치해줍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끼벽'과 같은 수목식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오랜 시간 머무는 주거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 Q 기대효과

식물로만 이루어진 초록색 이끼벽을 설치한다면 식물의 정화 능력이 만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운 미립자까지 제거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끼벽 하나로 대기오염 물질을 손쉽게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끼는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오존가스를 제거할 수 있으며 삭막한 화석 도시에서 푸르른 자연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구의 도시미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로·세로 1~2m의 벽에 이끼를 심어 도심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끼벽 하나의 효과가 나무 수십 그루와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크기와 부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고 높기 때문에 나무가 없는 도심에 설치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끼벽 앞에 벤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모양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곳곳에 설치한다면 거부감도 덜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효과도 탁월하며 비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대구시에 가장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한 대구형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끼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를 정화하는 중요한 필터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도시의 녹색커튼과 벽면녹화로 대구의 아름다움과 환경적인 유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코솔루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끼는 인위적인 공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자연의 힘과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인공구조물에 이끼와 식물을 심어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재창조하며, 대구 도심재생의 현실적인 대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정치·행정 분야







## Part 4

## 정치·행정 분야

## 42. 퍼스널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관련 시스템 구축 제안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이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따릉이 전기자전거 버전' 도입부터 시작해 점차 늘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퍼스널모빌리티의 이용자는 점차 많아질 예정인 만큼 사람들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도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소 이용 문제로 이용자들간 얼굴을 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경우 배터리 화재, 주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사건 사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회원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고,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회적인 시스템, 법률망이 많이 미비한 상태라 보입니다. 저 또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중간 중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자전거도로 진입 허용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실제로 매년 사고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자전거도로 허용 진입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와 그렇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안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퍼스널 모빌리티 기체와 일반 보행자간 사고
2. 자전거간 사고
  - 1) 일반 자전거간 사고
  - 2)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간 사고
  - 3) 전기자전거간 사고
  - 4) 자전거 도로 진입이 불가능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을 때 발생한 사고
3. 전동킥보드 사고 등

빠르게 급변하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법률 체계가 우선시 되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라도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럽을 가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전거 도로 등 사회적인 시스템이 엄청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따릉이'는 정말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적절한 충전소 설립, 관련 법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 43.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 강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과 벽간 소음 기준의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시점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입주민에게 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전 고지한 법적기준 미달 시 명백한 하자로 규정하는 것과 시공사 및 시행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입주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분양 후에 하자가 넘쳐나는 판국에 더 이상 나몰라라 식의 행정방식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인 75%가 아파트에 주거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년 층간소음으로 다툼은 예삿일이고 살인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웃 주민간의 배려와 이해 또한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들마저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중량충격음이 고작 별1개 등급으로 지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다.

건축비와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사자재 또한 고급 자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시공 중에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속이는 과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어린 유아가 있는 가정은 적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건물 공법이 계속되어 층간소음이 건축 단계에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아이혐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아니, 이미 층간소음의 문제만 놓고 보면 아이혐오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단계다.

현재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방식이 아무리 국제표준에 기준하여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문가들과 함께 보완하고 법적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44. 공익근무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 🔍 제안이유

공익근무제도는 현재 신체·환경적 조건이 미달된 사람들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써 공익을 창출하고 국민이 지닌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도 공평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근무제도는 여러 특수성을 지닌 제도이고, 논란이 되는 쟁점도 더러 있습니다. 그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는 대기자의 수가 현재 지원·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3년을 넘게 대기해야 하는 대기자도 존재하며, 장기적으로 유예되었을 경우 공익근무를 면제해준다고는 하지만 면제 조건도 해당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공익근무 면제자가 된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면제'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하고, 사회생활 시에 이에 대한 여러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 🔍 제안내용

따라서 공익제도를 두 가지 종류로 분산하고, 정상복무 신청에서 탈락된 경우 적립식으로 복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복무요원을 신청하는 현재 체제입니다.

둘째는 해당 복무지원에서 탈락했을 때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기간과 단기적인 복무로 분산하여 정상 복무기간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사회봉사자들을 협약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해서 사회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기자들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단기 지원하여 근무를 하고 이 기간을 정상 복무기간에서 차감하는 제도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 경우,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공익근무요원 신청 탈락으로 인한 장기 대기가 해소되어 공익판정을 받은 보충역들이 사회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대기자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막연히 근무신청을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없어지게 하여 공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기 근무가 요구되는 사회기관의 인력 수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소요예산과 자원조달 방안

소요예산은 현재 소요되는 예산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요구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익 근무 대상자들의 잔여 근무기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 조달은 기존 국방비에서 공익근무에 소요되는 정도의 자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감식 복무형태를 적용한다면 이에 필요한 정부·유관기관·근무신청 통합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맺음말

공익근무제도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도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비용 외에도 공익근무제도로 인한 잠재적인 비용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의 대기기간, 사회 복귀 시기의 지체)

따라서 공익근무제도의 개편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복리와 더불어 공익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근무제도의 개편을 제안드립니다.

## 🏠 45. 인플루언서의 SNS 허위 과장광고 제재 방안 제안

### 🔍 제안이유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인플루언서의 광고나 협찬 활동 시 허위 과장광고 제재

### 🔍 주요내용(현황 및 문제점)

1. 허위 과장광고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이 없음
2. 광고 게시물 내에 유료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음
3.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임상효과를 기술함
4. 공동구매 행위에 대한 세금신고 및 사업자신고 미비

## 🔍 재원조달방안

1. 국민 제보 채널 개설  
각 SNS 채널별로 국민 개개인들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신고하는 공식 채널 개설
2. 전문 모니터링단 구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문 인력단 구성
3. 개인 SNS의 게시물(사진, 영상)에 광고 혹은 협찬임을 나타내는 문구 필수 삽입
4.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이용후기 및 개선효과 언급 금지
5.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모든 개인은 사업자신고 및 세금신고 의무화

## 🔍 기대효과

1. 국민 제보 채널  
국민 누구나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가능함으로써 누락 없는 전방위적 감시 가능
2. 전문 모니터링단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즉각적인 위험 대비 및 공신력 있는 제재 가능
3. 유료광고 문구 필수 명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운영 및 소비자가 광고 여부 판단 가능
4.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된 후기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나 부작용 예방 가능, 허위 과장 광고 예방
5. 세금 및 사업자신고 의무화  
탈세 예방 및 납세 의무 준수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가능

## 🏠 46.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경찰청의 범죄 차량 데이터베이스 연동

### 🔍 제안이유

- 범죄자 및 범법자들로 인해 민생안전을 위협받는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의 프로그램과 경찰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함으로써 범죄자들의 사전 검거를 통해 민생 안전 확보를 위함

## 🔍 주요내용

- 대형마트 및 백화점등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경찰청에 등록된 범죄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범죄차량이 대형마트 및 백화점등 입구 통과 시 관련 정보가 해당 지역 경찰서에 통보되어 출구 통과 시 검거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소요예산

- 대형마트 및 백화점등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프로그램은 구축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범죄차량 데이터베이스 또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프로그램만 개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발생 비용은 프로그램 개발 비용 1억, 대형마트 및 백화점등과 해당 지역 경찰서의 연계비용 1억 (컴퓨터 지원등 라인 구축)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됨.

## 🔍 자원조달방안

- 확보된 지방재정을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 구축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 기타

- 범죄자 및 범법자들을 사전 검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이야말로 믿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 47. “예비방역팀” 설치(APP 개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지금처럼 경제와 국민의 건강이 모두가 위협받고 힘들어 할 때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희망공약을 제안해봅니다.

세계적 전염병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를 경험한 우리나라. 그때마다 방역을 잘해서 사망자도 없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전염병이 발병하면 사망자, 확진자가 발생하기에 정부를 떠나 각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먼저 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비방역팀을 설치하였음 하네요.

### 〈예비방역팀〉

말 그대로 전쟁에 대비한 예비군처럼, 전염병에 대비한 방역팀입니다.

세대주 위주로 팀을 이루고, 소방공무원과 각 자치구 보건소 직원이 총괄을 하며 1년에 한번 교육 실시 및 교육비, 사은품(세정제 및 마스크)을 지급하며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전염병이 우한에서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바로 “긴급재난문자”처럼 노원구 자체적으로 공지를 합니다.

그럼 바로 예비방역팀이 발동됩니다.

우선 각 세대주들은 평소 집에 비치해둔 세정제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앱이나 동주민센터로 직접 전화를 걸어 조치 및 격리를 실시하며

모든 상황은 바로 신속하게 자치구 총괄장에게 보고되어 사전에 대규모 전염을 막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비방역팀은 각 국민들 상태 확인 및 마스크, 세정제 등 각종 방역용품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직접 전달하는 업무를 포함해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방역 업무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은 중앙정부 3: 자치구 7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재원마련은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조치를 위해 예비방역팀을 운영하여, 지금도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받고 있지만 더욱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 48. 약국 내 히트맵 안면인식시스템 도입을 통한 역학조사 프로세스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감염자들의 대다수가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국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도심에 벗어난 곳의 소형 약국들의 경우에는 의료 환경이 도심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염자들의 행적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역학 조사 시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의 자발적 신고나 감염이 확산된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서야 확진자 발견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한 역학 조사에서도 감염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교통경로 등 감염 확진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감염확진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감염 경로 확인이 애매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악용해 자신이 확진자라며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방역의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격리 준칙을 무시하고 외부인을 만나는 등의 고의·과실로 인해 2차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역을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약국에 방문하여 열과 기침 등으로 해당 증상에 대한 약을 구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감염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약국 구매기록을 활용한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대부분이 의심환자들을 만나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모되는 시간문제나 예산, 거짓정보 등으로 오는 방역 혼선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 🔍 개선방안(실행계획 포함)

본 기술은 안면인식 및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히트맵, 피플 카운팅을 약국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용하여 약국 방문고객의 약품 구매 품목을 정리해 안면과 대조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심환자의 목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면인식 동작 구조〉

구매자 영상 → 안면 이미지 추출 → 성별·연령별 학습모델 → 고객정보생성 → 판매관리시스템전송

본 기술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열화상카메라(히트맵) 및 구매 약품을 바탕으로 감염자들의 증상을 미리 파악하고, 원래 찾은 병원이나 초기 감염증상을 약국 내에서 파악해 초기에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안면인식 및 피플 카운팅 기술을 통해 약국에 드나든 감염자의 인원 수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잠재된 감염자들 또한 파악하여 역학조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성별 및 연령대를 추정할 수 있고, 약품 구매와 대조하여 정보 생성이 가능합니다.
3. 질병의 대다수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출국 시 인근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공항 출입구에서 감염자를 미연에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면 인식의 경우 초상권에 저촉되므로 초상권 보호를 위한 획득 영상 자동 삭제 기능을 추가하고, 의약품 구매 관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구현하여 문제 발생 여지를 제거합니다.



## 🔍 기대효과 및 필요 조치사항

전염병 초기 증세를 파악하여 감염자들이 초기에 자주 사는 약품 목록을 데이터화 하여, 약품 구매 단계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환자를 미리 찾을 수 있으며, 감염 의심환자가 약국에 들어설 때 열화상카메라로 파악되는 체온 정보와 연동하여 감염예상자 파악 단계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진자라 판단되었을 때, 안면인식 프로세서를 통해 지역 내 약국들의 전산망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약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 감염자 조기 발견과 함께 약품을 악용하는 범죄자 색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약국을 통해 수면제 과다 구매로 범죄사건 발생, 마약 제작을 위한 의약품 구매

※ 본 개발품은 ‘중소벤처기업 산학연협력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으로 2017년~2018년 개발한 과제명 「약국 재고 및 약품 유통기한 시스템 개발」 중 약국 재고·판매관리 소프트웨어 및 구매자 성별·연령대 추정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내역을 바탕으로 기술한 개선의견서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기타 분야





## Part 5

## 기타 분야

## 49. 동물병원 진료비 통일화 또는 진료비 공개

- 동물병원 진료비, 수술비 전국적으로 통일
- 동물병원 진료비, 수술비 공개 의무

시대가 변함에 따라 1인 가구, 비혼, 워라밸 문화, 여가 시간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불릴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 수가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반려하게 되면 동물병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피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곳이죠.

그런데 전국 시·도별로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수술을 하는데 A동물병원은 50만원이라면 B 동물병원은 70만원이고, 같은 약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A동물병원은 2만원, B동물병원은 3만 5천원으로 동물병원 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여기에 맞춰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문의하면 “수의사의 실력이나 병원이 갖춘 의료시설에 따라 진료금액이 차이가 난다”, “70만원에 수술하기 싫으면 다른 병원 알아보라”는 식의 배짱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동물병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반려동물들의 진료비나 수술비가 통일화가 되기를 바라고, 병원의 장비수준이나 시설에 따라 사람들이 가는 종합병원, 개인병원처럼 진료비를 차등화 할 수는 있어도 막연하게 높은 금액대의 진료비를 형성하여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나 수술비를 통일화 시키는 것에 제약이 많다면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및 수술비를 공개(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도 진료비나 수술, 시술비 등을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하여 소비자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희망공약을 내어봅니다.

## 50. 폐의약품수거함 규격화 제안

현재 각 지자체별 폐의약품 수거함을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며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의약품 수거함이 통일성, 규격화 되지않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약국을 방문하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본 제안자가 인근 약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폐의약품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약통입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Q 개선방안

국민들이 쉽게 폐의약품 수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제안자는 폐의약품수거함을 통일하고 규격화 하여 국민들이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쉽게 수거함을 발견하고 이곳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적절한 사이즈로 통일성을 갖춰 제작하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2. 국민들이 폐의약품수거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문구를 포함한 디자인·제작
3. 약국 출입구 등에 폐의약품 수거일 안내가 필수
4. 약국 봉지, 종이봉투 등에 관련 사항 기재(약사회와 협의 필요)
5.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배너 또는 눈에 잘 보이는 비치장소를 마련(바닥이나 구석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 곳이 있음)

### Q 기대효과

국민들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약국 또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폐의약품 수거가 용이해집니다.

아울러 폐의약품을 집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 보다 약국, 보건소 등에 안전하게 버릴 수 있게 됩니다.

## 🏠 51. 여름철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 쉼터 마련

### 🔍 제안이유

여름철 더위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내용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지차제마다 설치하는 쉼터를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

### 🔍 소요예산

- 에어컨 1대(30만원) × 시민들이 많이 집결하는 장소(100곳) = 3천만원
- 전력은 11시부터 4시까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만 가동함으로써 전력예산 절감

### 🔍 자원조달방안

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일부 인상을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

## 🏠 52. 따릉이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한 제안

### 🔍 제안이유

2015년에 시작한 따릉이 서비스는 2020년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 있는 1,000개 대여소에 10,000대(1,000개소×10대=10,000대)의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서울시는 향후 10,000대의 자전거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자전거 구입 예산은 약 89억원(89만원×10,000대=89억원) 정도로 추산됨.

※ 1대당 가격(89만원)구성: 자전거값-35만2천원, 단말기값-51만5천원, 거치대-2만2천원

따릉이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구입예산 89억의 자체 확보방안을 희망공약으로 제안하고자 함.

## 🔍 자전거 구입예산(89억원) 확보방안

- 자전거에 홍보물 설치로 예산확보
  - 현재 보유한 자전거 10,000대에(거치대, 자전거 물받이 등) 기업체 홍보시설물 설치  
1대당 한 달 홍보료: 20,000원, 1년 홍보수입: 2억원×12월=24억원
- 자전거 이용 어플 광고 유치
  - 한 달 광고료: 10,000,000원, 1년 홍보수입: 1억 2천만원
- 3년에 걸쳐 10,000대 구매: 1년 차 -2,800대, 2년 차-3,600대, 3년 차-4,500대

이렇게 확보된 예산으로 자전거를 구입하고, 자전거 구입비로 편성되거나 편성해야 될 예산을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등 인프라구축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

## 🔍 우선순위

- 자전거 대여소 확충보다 전용도로 확충이 더 우선이므로 자전거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도로 확충에 활용하고 자전거 구입예산은 기업체 광고 홍보 수입 등으로 충당

## 🔍 기대효과

- 자체예산 확보로 국민 세금부담 감소, 예산의 적절한 활용으로 자원 재분배 효과, 일자리창출(관리 인력, 인프라구축인력) 효과
- 시민건강증진, 환경오염감소(자동차 이용인구 감소)

##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기업체의 참여저조: 동기부여(우수업체 홍보, 인증서 발급), 일정기간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 🔍 향후 자체확보 예산 활용방안

- 4년째부터는 20,000대 자전거의 활용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입 50억을 자전거 관련인프라 확대에 투입



## 53.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사용 자제 유도 방안 제안

### 🔍 이유

비응급환자들로 인해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시기적절한 치료 제한

### 🔍 주요내용

사회에서 소외받는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하는 호소처인 '119' 따라서 지금처럼 모든 요청자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송을 하되, 병원 이송 후에 이송된 환자를 진료한 의사들이 환자의 응급·비응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된 경우 구급차 이송료를 면제하고, 비응급 환자일 경우 이송료를 청구하도록 함. (사설구급차 요금 체계 참고)

단, 비응급 환자더라도 소득,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른 고려 후 사회적 약자들은 이송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함.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면제 및 감면 혜택(저소득, 다자녀, 다문화, 한 가정, 새터민 등)

※ 이송료 유료화로 인해 119 응급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 🔍 기대효과

이를 통해, 비응급 신고자의 119 신고자제로 응급환자들이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응급 환자의 소생을 상승 기대

## 54. 채용 시 불합격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유 공개 제도 도입 제안

### 🔍 제안이유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직자들의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 및 장기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단순히 구직자 배려뿐 아니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어 '면접 결과 피드백 제도' 도입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임

### 🔍 주요내용

채용 피드백은 ①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전달하는 피드백 ② 지원자가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피드백 양방으로 구성함. 면접 진행 후 그 과정에서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이 면접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서로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 소요 예산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서 자체 마련함. 다만 본 제도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조세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

##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

발 행 일 : 2020년 5월

발 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Tel. 02-523-6482  
[www.nec.go.kr](http://www.nec.go.kr)

제 작 : 케이엠커뮤니케이션(주)  
Tel. 031-478-5700

---

〈비매품〉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중앙동 2-3)  
TEL. 02)523-6482